

kiri Weekly

2015.3.2 제322호

포커스

2014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글로벌 이슈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인도 경제성장률 상승 원인과 전망

금융시장 주요지표



2014년 보험산업 회고(V): 재무건전성

김해식 연구위원

요약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음. 정량적인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경영의사결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금융기업의 부실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이렇게 정성적인 과정을 살피는 규제의 변화는 보험회사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요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에 규제 마련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음. 규제 마련 과정이 투명해지려면 이해당사자와 금융당국 간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그동안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 로드맵에 담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시가”와 “과정”은 국내 보험산업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일지 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끈기가 가장 필요한 도전이 될 것임.

- 금융당국은 2014년 7월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을 발표하여 보험회사의 요구자본과 가용자본, 그리고 위험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종합로드맵은 2018년까지 위험계수 상향 조정을 통해서 요구자본량을 늘리고,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IFRS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후 가용자본을 산출한다는 정량평가 강화 계획을 제시함.
 - 또한 보험회사 스스로 위험 및 지급여력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모니터링하는 정성평가 강화 계획을 제시함.
- 재무건전성 규제 로드맵은 보험회사 지급여력을 “시가” 정보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결과”를 보는 정량 평가를 “과정”을 보는 정성평가와 병행함으로써 국제기준의 최근 흐름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 국제감독기준이 요구하는 “시가에 기초한 지급여력 평가”에 대하여 2014년 로드맵은 시가정보 생산기준을 IFRS로 삼고 RBC 위험계수 상향을 담은 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제시함.

- 금융위기 이후 달라진 규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현재 달성한 자본량보다 그 자본량이 보험회사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달성됐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인데, 2014년 로드맵이 그 “과정”에 주목한 점은 감독철학의 일대 변화를 의미함.
- 그러나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현실에 안착하려면 IFRS에 따라 생산된 시가정보 활용 시 제약사항과 기존의 규제 관행이 가진 한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청산은 물론 계속기업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IFRS 회계정보를 재무건전성 감독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임.
 - 그런데 IFRS 시가평가 최초 적용에서 기존 보유계약을 평가할 때 예상되는 생명보험회사 RBC비율의 급락 가능성과 같이 새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음.
 - 또한 시가평가나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규정에 익숙한 국내 보험산업에는 아직 생소한 방식이기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체하려는 유혹이 클 수 있으며, 이는 모범규준의 규정화 사례처럼 과정 대신 결과를 보는 정량평가 틀로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음.
- 2014년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담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 “시가”와 “과정”은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을 가진 새로운 시도여서 끈기가 가장 필요한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임.
- 1997년 외환위기 직후 EU식 지급여력비율이 1999년 13%에 불과했던 생명보험은 3년 만에 100%를 넘어섰고 5년 만에 200%를 초과하여 안정권에 들어섰는데,¹⁾ 이는 금융당국 주도의 신속하고도 지속적인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서 얻은 성과였음.
 -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의 ‘시가평가 및 위험관리’ 과정에 대한 감독은 모두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성적인 요소를 살핀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전혀 다르게 전개되고 있어 제도 시행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기존의 금융당국 주도의 속도전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전제로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규제를 마련하는 절차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임. **kiqi**

1) 위험계수 100% 적용으로 환산한 지급여력비율. 금융감독원(2006. 9. 19),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변동원인분석” 보도참고자료.